

# “괴담 마약” vs “정치보고서” 여야, 日 오염수 갈등 최고조

### 국힘 “대국민 쿠데타·변두리 불량 국가 야당처럼 행동” 민주 비판 민주당 “IAEA 검증 신뢰성 의문… 대국민 서명·원정 투쟁 나설 것”

여야는 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과학적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우병 괴담, 전안함 자폭 괴담, 사드 괴담처럼 달콤한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우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면서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 있는 것”이라 비난했다.

또 윤재옥 원내대표는 “은갖 괴담을 생산·유포한 민주당은 IAEA가 어떠한 결론을 내든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할 태세”라며 “보편적 국제 기준과 규범을 따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변두리 불량 국가의 야당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대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열어 오염수 거짓 선동과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막말을 쏟아낸다”며 “도를 넘는 막말이 (대)국민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주 한국결합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8%가 오염수 방류에 ‘격정된다’고 답한

데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저도 그렇고 국민 전체가 방류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고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안전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계획이 안전하다’는 IAEA 결론이 나오면 민주당이 수세에 몰릴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야당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IAEA가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낼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공식적으로 방류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IAEA의 검증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과학적 보고서보다는 정치적 보고서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며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에 승소한 이유는 ‘장소의 위험성’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인데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 오염수 방류를 찬성



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IAEA 검증결과 대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하게 되면 과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명분을 지킬 수 있을지 묻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IAEA 보고서는 로비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다. 일본 자본이 IAEA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공정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국민 서명운동, 장외집회에 이어 단식 투쟁, 원정 투쟁까지 나서며 전방위적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은 오는 10-12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어민 대표 4명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앞과 일본 국회 앞 등을 찾아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알리고 돌아올 방침이다.

민주당도 소속 의원들에게 출국 자제와 함께 비상 대기령도 내렸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도중 지인과 일본 여행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논란이 인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회견과 만나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엄중한 대처를 하는 차원에서 필수 공무 이외에 의원들의 출국을 자제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IAEA 최종 보고서 제출을 전후로 당분간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오염수 방류되면 일 수산물 수입? 사실 아냐”

### 정부 “별개 문제” 거듭 밝혀

정부는 3일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우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별개 문제라고 거듭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 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이 앞바다에 바로 방류하기보다는 해

저터널을 통해 거리를 두고 방류해 안전을 담보 받고 각국에 수산물 수입을 재개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의 지적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 여러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박 차장은 “언론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정부와 여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정부는 국제법을 지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한 방류를 할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해왔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방류는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나오기도 전에 해양 방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이 우리에게 해가 없을지 검증하기 위해 일련의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또한 “IAEA가 일본 측에 특정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IAEA는 일본 측이 제시한 5가지 처리 방안 중 해양·수중기 방출로 선택지를 좁힐 때 사용한 ‘방법론’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일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일본 정부의 안전성 평가 작업이 곧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박 차장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6월 30일에 오염수 배출설비의 사용전 검사가 종료됐다고 발표했다”며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면, NRA는 약 1주일 정도의 내부 절차를 거쳐 도쿄전력에 (검사) 종료증을 교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료증이 교부되면 해양 배출을 위한 일본 정부 측의 안전성 평가 작업은 모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문 정부 당시 태양광 등 5824억 위법·부적정 집행”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과 부적정한 집행이 대거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은 말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차 점검 대상 사업은 약 6조 원 규모였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적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박 차장은 이 중 대출을 받을 때 부풀린 세금계

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활용한 경우를 가리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791건에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또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으며,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尹 지지율 42.0%로 상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러블 의뢰로 지난달 26~30일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0%포인트(p) 상승한 42.0%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 상승세(38.3%→38.7%→39.0%→42.0%)로, 지지율 40%를 넘어선 것은 5월 넷째주(5.22~26일, 40.0%) 조사 이후 5주 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4%p 내린 55.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최근 3주 연속 하락세(59.0%→58.0%→57.5%→55.1%)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

/연합뉴스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 백신 냉장고 도입 |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